

대통령서 당대표·실세까지... 김경수의 광폭회동 '주목'

〈경남도지사〉

옛새간 文·이해찬·양정철 만나

“21대 총선, PK 사수의지” 목소리
관건선거 기획... 뒷말 나올수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한 정계의 시선이 뜨겁다.

김 지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유력 인사들과 잇따른 만남 행보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김 지사는 지난 5일 창원에서 열린 환경의날 기념식 때 문 대통령을,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인근 한 식당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0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을 각각 만났다.

김 지사가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옛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만나 포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이 둘은 양 기관 업무협약을 위해 이날 만났다. /연합뉴스

간 여권 유력 인사들과 회동을 갖자 '여권 실세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계 안팎에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0일 메

트로신문과 만나 “김 지사는 작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직에 당선됐다”며 “경남은 여권 불모지로 정평이 난 곳 아닌가. 김 지사는 이때부터 여권의 미래권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따라서 김 지사와 여권 유력 인사들의 잇따른 회동은 다양한 해석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PK(부산·울산·경남)지역 사수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유력 인사들과 잇따른 만남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의 김 지사를 만나 '전폭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도 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관건선거 기획'이라는 뒷말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김 지사-이 대표 회동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에서 김 지사가 경남경제 회복을 위한 중당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이 대표 회동은 '보석 후 김 지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게 민주당 측 전언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국민 10명 중 8명, 복지확대 증세 “정당”

정당하지 않다 22.6%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다.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35.58%),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21.89%),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 (19.79%) 등을 들었다.

'대기업이 영세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68.37%가 '정당하다'고 찬성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26.23%였고 '모르겠다'는 5.4%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68.9%가 '정당하다'고 동의했다. 27.89%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으며, 3.13%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는 68.92%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야 각당 대표와 참석자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공연을 감상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원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장과 한국당을 제외한 당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 단독행보 언제까지... “여야 힘 합쳐야 할 시기... 시작도 못해”

국회의장-여야 4당, 초월회 회동 “추경안 제출한 지 한달 반 지나”

자유한국당 투쟁으로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자 당정(여당-정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를 압박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상화 관련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먼저 문 의장은 “시국이 추경·민생 현안으로 복잡하다”며 “해법을 위한 여야 협력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아직 시작도 못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답답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다”며 “추경안 하나 갖고 국회를 두 달이나 파행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질타했다.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정동영 민주평화·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늦어도 다음 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전 문 의장과 통화하며 추경

안 등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을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다급해진 당정은 이날 오전 추경 관련 확대고위당정협의회까지 열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았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며 “민생·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지도 수개월째”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외에도 1만40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업계·분야마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산업계의 경우 지난 4월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올 초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두고 공방했지만, 현재는 얘기조차 안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 분야에선 'P2P(인터넷에서 개

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해 파일 등을 공유하는 것) 금융업체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다. 투자자의 불안감과 위기감은 더욱 커졌지만, 대응할 법안은 전무한 상태다. 규정법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회 공전 장기화로 P2P 금융거래 법제화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황대표는 이날 초월회와 여야 4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던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일정이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선거제도·사법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 이후 악화일로로 걷는 정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두고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세계경제·야당·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정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원리주의적 좌파이념에 매몰돼 우파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며 “현 정부 들어 결국 보수 가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같이하기 힘든 계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제 효율을 추구하는 우파 가치를 수구적으로 매도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韓, 스웨덴 제조업정책 'P2030' 본받아야

한경연, 제조업 혁신 보고서

대한민국이 스웨덴 제조업 정책을 본 받아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 민간주도형 혁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3년 제조업 도전 과제를 반영해 P2030을 도입했다. 스웨덴 엔지니어링 산업연합이 제안한 '메이드 인 스웨덴 2030' 아젠다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P2030은 제조업을 특성에 따라 ▲자원효율적 생산 ▲유연한 생산 ▲가상생산 ▲생산시스템에서의 인간 ▲순환생산시스템과 유지 ▲융합제품 및 제조 등 여섯가지 중점 분야로 분류했다. 또

4가지 정책 수단을 제시해 프로젝트 펀딩, 중소기업, 교육,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특화 운영 중이다.

P203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를 반영했다. 대기업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 재원을 30~50%까지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와 산업계 공동 펀딩으로 만든 프로젝트 워크숍을 공유받고 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연구결과와 네트워크도 동시에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반도체학과 신설 등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교과과정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대학원 과정을 발달시켜 제조업 전반 첨단 기술력 강화를 꾀한 스웨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P2030이 2014년부터 별도 학교 설립이 아닌 21개 대학 및 기관 대학원 과정으로 30개 이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재용 기자 juk@